

대기업 연간 전기료 100억 ↑… PPA요금제 철회·개선 촉구

〈직접구매계약〉

대한상의,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
기업 대다수 전기료 부담 증가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결림들
“기업들, 추진동력 상실된 상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급부상한 ‘직접구매계약(PPA)’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50% 이상 비싼 PPA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다. PPA 요금제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연간 60억~100억원, 중견기업은 10억여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계는 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만큼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변경·중단 등의 혼란이 빚어지며 PPA제도가

〈PPA전용 전기요금과 기존 전기요금 증감율 비교〉

요금제		PPA전용 전기요금(A)	산업용 전기요금(B)	증감(A-B)
기본요금(원/kW)		9,980	6,630	+3,350 (▲50.5%)
시간대별 사용요금 (원/kW)	경부하	95.1	94.9	+0.2(▲0.2%)
	중간부하	127.1	140.2	-13.1(▼9.3%)
	최대부하	179.4	196.4	-17.0(▼8.7%)

※일반용·산업용(을) 요금·고압B(선택) 겨울철 요금 기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PA는 기업이 한전 운영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 된지는 아직 2년이 안됐다.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상의는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부담이 크

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은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데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해말 전격적으로 신설돼 업계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 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PPA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결림들로 작

용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제 PPA요금제는 대다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돼 PPA요금제가 PPA 확산에 결림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PPA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60~100억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통상 PPA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00억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는 원가상승,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업체 A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급망의 요구가 있어 비용부

담에도 경영진을 설득해 PPA계약을 추진했는데 PPA요금제로 추진동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예기치 않은 요금인상도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사용, PPA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더욱 아쉽다”고 토로했다.

상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요금제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산업생산 0.5% 소폭 반등 ‘불확실성 여전’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

지수 109.7, 증가폭 7개월만에 최대
광공업 생산 2.9% ↑ 반도체 -5.7%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이 0.5%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지속에 기업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11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5.7%) 생산이 크게 줄어 들었다. 하지만,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9.6%) 등이 늘어 전체 광공업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 출하는 0.7%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반도체(-25.8%)와 기계장비(-6.5%), 전자부품(-6.4%)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1% 늘었지만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보험(-5.0%) 등에서 줄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종합 소매업 등 도소매(3.7%) 등에서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3.1%) 분야도 늘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1%), 12월(-0.2%)에 이어 올해 1월(-2.1%)까지 3개월째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죄다 줄어든 영향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수입차 일부 브랜드 출고 중지, 전기차 출고 지연 등으로 수입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줄고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줄어든 것도 소매판매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반도체 반등없이 수출 조기회복 어렵다”

추경호 부총리, 수출투자 대책회의
“콘텐츠, 서비스·제조업 성장 견인
2027년까지 K-콘텐츠 집중육성”

최근 반도체 부진 탓에 당분간 수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국 등 주요국 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없이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면서도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중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개선됐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은 0.5% 소폭 반등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도 출시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 항공 운항이 복원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재개되고 있어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GMC 시에라 등도 픽업트럭 경쟁 나서

》1면 ‘세단·SUV 이어 픽업트럭’서 계속

F-150 라이트닝의 공식 주행거리는 230~320마일(약 370~515km)이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은 표준형 배터리를 탑재한 프로, 배터리 확장형 프로, 래리엇(Lariat), 플래티넘 등으로 판매한다. 표준형 프로의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최장 230마일(약 370km), 배터리 확장형 프로와 래리엇은 320마일(약

515km)이다. 최상위 플래티넘은 300마일(약 482km)가량이다. F-150 라이트닝은 가정용 충전 시스템과 150kW DC 급속 충전 방식 등을 지원한다.

GM(제네럴 모터스) 산하 브랜드인 GMC와 쉐보레도 각각 시에라 전기픽업과 실버라도 EV 등으로 시장 경쟁에 나선다.

국내 완성차업체에서는 기아와 쌍용차가 전기 픽업트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쌍용차는 내년 하반기 전기차 픽업트럭을 준비 중이다. 렉스턴 스포츠의 후속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는 EV6를 생산하고 있는 오토랜드 화성에서 내년부터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수 및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아가 새로운 픽업트럭을 선보이는 건 1981년 브리사 픽업 단종 이후 43년 만이다. /양성운 기자 ysw@